

# 기후변화대응 천문학적 비용 불가피

IEA, 에너지 인프라에 10조달러 이상 ... 개도국 지원에도 1000억달러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코펜하겐의 기후변화협상이 타결되면 에너지 생산방식의 변화에서부터 주거와 농업경작 방식의 전환,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시장의 조성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를 수반함에 따라 천문학적 비용 소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NYT(뉴욕타임스)는 12월9일 기후변화협약이 엄청난 가격표를 달게 될 것이라면서 비용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서 2010-30년 각종 시설의 전환비용만 10조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 지원비용으로 앞으로 3-4년간 연간 100억달러의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이다. 6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기후·에너지 관련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까지 개도국 지원에 연간 80억달러를 배정하게 된다.

또한 EU(유럽연합)와 정책그룹인 Climate Works가 구성한 촉매(Catalyst) 프로젝트에 따르면, 개도국에서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약 100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50%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100억-200억달러는 항공·선박연료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하며 250억-350억달러 가량은 선진국들의 용자나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도이체방크 자산운용의 글로벌 최고책임자인 케빈 파커는 “사람들이 간혹 비용에 대해 묻곤 한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행동하지 않은 결과의 비용은 보지 않는데 이는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10>